

# 인사위원회 신설 '시급'

## 군승단 인사파동 배경과 향후전망

### 육본 인사권 일시적 회수...자율권 훼손 비리법사 징계 이어 자정움직임 가속화

원칙없는 인사가 급기야 군승단의 자율성 훼손을 자초하는 결과를 빚었다. 군승단은 매년 7월 군법사의 신규임관에 따라 근무지를 이동한다. 올해도 13명의 법사가 임용돼 일선 군법당에 배치된다. 군법사 이동은 군종장교라는 특수성을 인정, 육본본부에 근무하는 군종보좌관(불교는 김말환법사)이 인사초안을 마련해 육본 인사참모본부에 제출하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지난 6월 김말환법사가 작성한 육본 군법사 근무지변경 정기인사와 관련해 원칙이 무시된 인사라는 반발이 잇따랐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군법사는 "초임자가 임관하는 법당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군법사를 배치하거나, 영관급 이상의 군법사가 맡았던 논산훈련소의 경우 3년차의 위관급 법사를 배치한 것은 인사원칙은 물론 효율적인 군포교를 무시한 것"이라며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군승단 비리처결을 주장했던 법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라며 반발했다.

이같은 잡음이 일자 육본 인사참모본부는 종단보좌관이 제출한 인사초안을 백지화하고 인사대상 법사에게 직접 전화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군승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종단보좌관에게 맡겼던 인사제안권을 일시적으로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김말환법사는 "군포교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임했느냐는 판단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했다"며 원칙을 무시한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법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는 군승단 인사는 임관 15년 이상의 법사들로 구성된 원로법사회에서 의결토록 돼 있으나 이를 생략한 채 종단보좌관에게 맡겼다. 중요한 인사를 하면서 규정조차 없고, 몇 사람에게 의해 이뤄진다면 제한된 징급, 선호 법당, 장기복무 등으로 당연히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 신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 군법사는 위관급, 영관급, 각 군법 대표자 10인 내외의 인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포교원도 군승단내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토록 권고하

고, 인사사 포교원과 호법부 총무부의 재가를 받는 방향으로 종단의 지도력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사파동과 관련, 군승단 내에서는 특정이 인사제안권을 행사함으로써 군승단의 위상을 추락시킨데 대한 책임을 묻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포교원도 인사초안을 제출한 김말환법사에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파동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과 책임자 문책이 뒤따를 경우 지난 해 비리법사 징계에 이어 군승단 자정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인사파동을 계기로 군승단 자정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1월 불사비리 군법사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결의한 군승단 정기총회 모습.

## "조직관리 투명성·전문성 필요"

대구경실련 불교발전 시민토론회 전영평교수 주장

재가 입장에서 불교계 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토론회가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대구경실련 불교시민회(회장 강인성) 주최로 21일 대구진각회관에서 열린 '불교계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전영평교수(대구대 자치행정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불교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합리화와 자주화를 달성하고 사회화적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수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불교는 대중과 유리될 수 없는 사회적 생명체일뿐 아니라 조직현상이다"고 전제한 뒤 "재가신도들의 자발적 행동이 중요시돼야 하고 불교조직관리의 투명성과 민주성 및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수는 이어 "불교의 합리화는 초기 불교의 사상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일부 스님들이 재정확보를 위해 영합하고 있는 기복신앙은 버리고 수



행불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교의 자주화를 위한 대안으로 △신도들의 중무행정 참여 △의무부담 사제 도입 △문종중심의 폐쇄적 운영 혁파 △정정권력감시단 구성 △비구와 비구간의 공동체 참여 등을 제시했다.

전교수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 "지금까지 주로 대중구제 차원에만 치우쳐 있었다"고 비판한 뒤 "권력의 횡포와 사회부조리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시정요구를 통해 대중의 호응을 얻고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수는 대구경실련 불교시민회와 공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도영)가 개산 140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불사를 전개하고 있다. 금산사는 19일 2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개산 1400주년 기념관' 개관과 기념불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사에 착수했다. 2000년 5월 회향을 목표로 30여건이 넘는 기념불사를 진행할 기념불사 추진위원장 도영스님을 만나 불사추진의 의의와 계획을 들었다.

-금산사 개산1400주년의 의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금산사는 내년으로 개산 1400년을 맞는 한국의 대표적 미륵도량입니다.



**수요 인터뷰** 금산사 개산 1400주년 기념불사 추진위원장 도영스님

## "대사회 미륵심선운동 전개"

나. 백제 법왕원년(599)에 창건되어 제1종창주 진표율사가 미륵장유존상을 조성하고 철학법회를 열어 백제 유민들의 비애를 불교사상으로 융화했던 도량입니다. 이제 21세기를 앞두고 도덕과 정신문화가 황폐해진 사회 현실을 바라보며 금산사가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융화하는 새로운 도량으로 거듭나야 할 때임을 절감합니다.

-상당히 방대한 규모의 기념불사를 계획하고 계신데 중요한 사업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금산사의 1400년 역사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매년 한차례씩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학술회의를 통해 미륵신앙에 대한 학술적 조망과 현대사회의 역할을 규명하게 될 것입니다. 미륵심선 운동의 전개를 위한 미륵심선회를 조직해 대사회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각 말사를 특성화하여 본사중심의 사찰운영에서 탈피하여 모법적인 사찰운영을 꾀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북지역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서의 금산사를 창출해 나가는 열린도량 가꾸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족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으로는 금강산 발원사 복원을 추진합니다. 발원사의 복원 계획은 단순히 북한지역의 사찰을 복원한다는 의미에 앞서 통일운동에 금산사가 주체적인 역할을 해 나간다는 정서적 의미도 부여된 것입니다.

미륵신앙 학술적 조망 금강산 발원사 복원 추진

-미륵심선회의 조직과 운영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중심으로 금산사와 인연있는 대중들을 위해 10명 단위의 심선회를 조직하고 그 구성원들이 다시 각각 심선회를 조직해 나가는 그물망의 형태로 조직을 확산해 나가며 미륵심선행위를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금산사에서는 연간 5천여명의 불자들이 미륵심선회를 수계 받고 있는만큼 실천운동으로서의 미륵심선 운동은 상당한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천년까지 모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십니까?  
▲물론 어느 시점에서 종료된다는 의미보다는 21세기의 금산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는데 매진한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불사들은 가능한 기간내에 완료하겠지만 지속되어야 할 사업, 예를 들어 미륵심선운동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임연태 기자

천왕의 태자 벽리가 전생에 왕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그는 인생 무상을 느껴 보시를 하려고 신하들을 골랐다.

"내가 큰 북을 만들어 그 소리가 백리까지 울리도록 하려하오. 이 일을 해낼 자가 있겠는가?"

"광상이라는 신하가 있는데 그는 늘 삼강마무를 충성으로 삼고 국민을 자비심으로 구제해 온 사람입니다."

왕은 그에게 뜻을 전하고 비용을 내렸다.

광상은 창고의 재물을 왕궁 앞에 운반해 놓고 나서 북을 치며 명을 내렸다.

"어지신 우리 대왕께서 자비를 베푸사 백성의 공립함을 건지려 공양하니 가난한 사람은 모두 오라." 이 말이 퍼지자 가난한 사람들이 길에 막힐 정도로 몰려 들었다. 1년후 왕은 광상을 불렀다.

"북은 다 되었느냐?"

"벌써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 북소리가 아니 들렸단 말이나?"

"인하올건데 대왕께서는 국내를 순행하며 지방에 진동하는 북발의 북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왕은 어가를 재촉하여 순시의 길에 나섰다. "우리 백성이 언제 이렇게 많아졌느냐?"

"대왕께서 큰 북을 만들라 하셨을 때 소신은 마른 나무와 죽은 가족으로는 대왕의 후덕을 떨치게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로 백성의 공립을 구제했더니 이웃나라 백성들이 주린 자식 어미찾듯 모여 들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나라의 불안은 물에 빙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거니와 비로운 신하를 통해 자식을 주어 백성을 구하리라."

그후 왕은 죽어 천도왕이 되었고 다시 천왕의 아들 벽리로 태어났다.

부처님께서는 벽리에게 이르셨다. "무릇 사람의 행위란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산울림이 소리에 응하듯 보답이 따르지 않음이 없나니라."

6·4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말 공약이 화려하다. IMF로 국민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씹어가는 3~4급수 수돗물을 마시게 한 책임은 뒷전이다. 참회로써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보다 국민을 먼저 챙기는 현명한 일꾼을 가려내자.

## 목어

### "누굴 뽑을까"

# 중앙승가대학 동문회 운영위원회의 "봉은사 주지 추천 결정 건"에 대한 봉은사 대중의 입장

「봉은사 대중 일동은 지난 제3차 중앙승가대학 동문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안건 처리된 '봉은사 주지 추천 결정 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를 단호히 반대함을 밝힌다.」

**봉은사 주지 추천은 봉은사 대중의 의견이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

봉은사에 거주하는 대중 일동은 불법홍포 및 신도포교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왔으며 미려하나마 승가대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지난 5월 15일 제3차 동문회 운영위원회에서 봉은사로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인 봉은사 주지 추천 문제를 봉은사 대중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소수 몇몇 스님들이 결정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봉은사 주지 추천은 봉은사 대중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을 밝힌다.

**중앙승가대학 동문회 운영위원회는 봉은사 주지 추천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봉은사 주지 추천 결정의 문제는 동문회 운영위원회의 의제가 될 수 없다. 전 주지 대운스님, 성문스님, 그리고 현 무상스님에 이르기까지 동문회 운영위원회에서 주지를 결정하고 추천한 전례가 없다. 그럼에도 동문회 운영위원회가 전례도 없는 봉은사 주지 추천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여 결정하는 것은 모종의 정치적 의도임이 분명하며 이는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일이라 판단되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봉은사가 적극적으로 승가대학을 지원해 온 것('97년 기준 일년 예산의 30%가 넘는 10억원 이상 지원)은 순수한 도제 양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럼에도 '봉은사 주지가 승가대 전 학인들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야 하며, 동문회 운영비도 전액 지원해야 한다.'거나 '재정지원 사찰로서 지원에 소홀했다'라는 등의 운영위 석상의 발언은 마치 봉은사를 중앙승가대학 동문회에서 운영하는 사찰인

양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봉은사 주지는 단임제'로 하며 '중앙승가대학 동문만이 주지를 할 수 있다'는 등의 결의는 중앙승가대학 동문회 운영위원회가 봉은사 주지 임명권은 물론 증빙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일으키게 한다.

**중앙승가대학 동문회 운영위원회는 봉은사 주지 추천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중앙승가대학 동문회는 모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문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친목단체적 성격을 갖는다. 어떠한 형태로든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모색하거나 이권을 위해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함에도 신임 동문회장 호종스님은 동문회장 선거 당시 끊임 없이 파벌 조장으로 동문들 간의 화합을 깨뜨렸으며, 동문회장 당선은 봉은사 주지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러한 와중에 동문회 운영위에서 봉은사 주지 추천을 복수 추천으로 결정했다가 이를 파행적으로 본인 단독 추천으로 번복 결정한 것은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신임 동문회장은 중앙승가대학 동문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학교 발전과 동문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길 바란다.

「봉은사 주지 임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단 발전과 봉은사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을 봉은사 대중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중앙승가대학 동문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안건 자체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에 이를 단호히 배격하며 향후 이러한 불순한 의도가 계속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불기 2542년 5월 19일

#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대중 일동